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5월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서울시는 5월2일까지 구청이나 전자신고를 통해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달라고 14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국세)와 달리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로 안분해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서울시 내 둘 이상의 자치구에 사업장이 있으면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청에 일괄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시는 수출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선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7월 말까지로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므로 신고는 원래대로 5월2일까지 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 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기존에는 천재지변 등의 재해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세인 법인세에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손실 비율만큼의 세액을 차감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태풍이나 화재 등의 피해를 본 법인은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재해손실세액 차감을 신청하면 납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유류세 인하 8월말까지 연장... 리터당 휘발유 250원·경유 212원↓

정부가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를 4개월 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달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월말까지 4개월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유종별로 휘발유는 전세 세금의 25%, 경유·LPG부탄은 37%를 깎아주고 있다.

기재부는 서민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로 최근 산유국의 감산 조치로 국내 유가가 오르고 있

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 212원, LPG부탄 73원 인하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

기재부는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차질없이 연장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우선매수권검토... 저리대출 지원 방안도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주택 경매 때 우선매수권을 주고 저리대출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전세사기 주택 피해자들의 법률 상담과 심리 안정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버스'도 오는 21일부터 운영한다.

당정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전세사기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열린 당정협의회 이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금융권의 경매·공매 유예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하고,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피해주택 경매 시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게 제도적 보완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면서 "피해 임차인이 거주 주택 낙찰 시 구입자금을 마련하도록 저리로 대출을 충분한 거치 기간을 뒤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조직적 전세사기는 범죄 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고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보전 조치 취하기로 했다"면서 "인천 지역 유력 정치인 개입 의혹이 있는 '건축왕' 남 모 씨의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한 배경 등을 포함해 경찰청이 특별수사하도록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 임차인들의 요청사항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당 TF와 정부 TF 간 활발한 연계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현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추가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해 이른 시일 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